

“전 정권 죽이기가 유일한 국정기조... 국민과 함께 싸울 것”

민주 원내대책회의...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에 대해 강경 메시지 수사 압박 단일대오로 돌파...오늘 의총서 이상민 해임·탄핵 전략 논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을 계기로 정부와 여권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서 전 실장 구속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 대야 강경 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흔들리는 당내 분위기를 결집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 전 실장은 증거인멸을 위한 어떤 권한도 갖지 않은 민간인 신분인데도 굳이 구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원과 검찰은 답해야 한다”며 “전임 정부를 망가뜨리겠다는 전형적 정치보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눈엣가시인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가 정부의 유일한 국정기조”라며 “민주당은 추잡한 정치 보복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던 상황에서 검찰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은 만큼 당분간은 계파의 이해를 넘어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론과 관련해 문책을 버리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및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이 향후 단일 대오의 방향을 점치는 국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지난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로 급주 중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의 처리 전략을 결정한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처리’는 의견이 모인다면 여야가 논의 중인 예산안 처리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아직은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분위기다.

특히,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서는 의사일정 합의가 필요하다. 당 일각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이후 임시회에서 이를 추진할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의 처리)을 올해 중, 혹은 다음 임시회 중에 확정한다는 게 양당 의견”이라며 “그것 때문이라도 정기회 직후 임시회를 다시 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려면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 민주당은 한편, 정부·여당이 주요 정책 결정으로 정치 보복을 넘어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서영교 최고위원 등 의원 50여 명은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국민연합’의 고발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을 의견을 낸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민간위원들이 표적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4대강국민연합은 민간위원에 대한 억지 고발을 철회하고 윤석열 정부는 검경을 동원한 표적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양항 물류 수송 정상화 수순

입구 막던 화물연대 차량 철수...노조 “업무 복귀 아냐”

광양항 입구를 막고 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차량들이 6일 오전 빠지면서 항만 화물 반·출입이 이뤄지고 있다.

항만 당국은 물류 수송을 재개하고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화물연대 측은 업무 복귀는 아니란 입장이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양항 3개 출입구를 막고 있던 화물 차량과 인근 전막, 집회 인원 등이 철수해 물류 차량이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다.

광양항 화물연대파업 비상대책본부도 “컨테이너가 게이트를 통해 오가고 있다”고 확인했다.

실제로 파업 시작부터 항만 출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화물 차량과 전막이 이날 오전부터 보이지 않고, 출입구에는 컨테이너 화물 차량들이 부지런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를 가로막는 차량이나 방해 행위 등도 없었다. 광양항에 관용 및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8대를 추가 투입한 정부도 이날도 12대를 추가해 컨테이너 반·출입을 돕고 있다.

하지만 공식 업무 복귀는 아닌 만큼 운반 차량이 부족해 물량당 자제는 전날과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항

만 당국 관계자들은 “화물 기사들이 속속 복귀하면서 물류 운송이 재개되고 있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광양항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운송거부를 이끄는 민주노총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민주노총 전남지부 관계자는 “특정 지부에서 잘못 내린 지침에 노조원들이 업무를 보러 가는 등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지침이 잘못됐으니 파업 대열로 복귀하라”는 문자를 다시 발송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도 “필수 품목을 긴급 물류로 댐 거처 전막을 걷은 적도 없고 파업 철회도 전혀 아니다”고 부인했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광양항 출입구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野 “정부, 화물연대 파업 협상 테이블 가동해야”

민주 “정치 파업 매도”...정의 “노동자 파업권 짓밟아”

여야는 6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노총이 멈춰야 나라가 산다”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중단과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가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의 파업에 업무 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원칙적인 대응에 나선 가운데 여당도 발맞춰 ‘민주노총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의 파업 명분은 ‘반(反)노동정책 저지’라고 하지만 실질은 반(反)민생·반(反)정권투쟁”이라며 “그들은 매번 전체 노동자 이름을 들먹이지만, 일부 귀족 노조원들의 특권만을 챙기려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은 “민주노총은 올해 8

·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민생파탄’,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전쟁반대·평화실현’ 등 북한식 준치 구호만 남발했다”며 “현재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투쟁이 아닌지, 윤석열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투쟁이 아닌지 돌아보라”고 꼬아붙였다.

이날로 파업 13일째 접어들 화물연대 소속 일부 조합원들이 불법도박으로 검거된 일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퍼기도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도박으로 검거된 조합원들이 ‘할 게 없어서 시간을 보내려고 그랬다’는 변명이 더 가관”이라며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불법파행을 강행하는 화물연대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장기화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맹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에 비유하며 사태를 극단으로 치닫게 했다”며 “이 사태를 당장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나올 수 없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즉각 재가동하라”고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 이어 의원단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대응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을 언급하며 “노동자의 파업권을 짓밟겠다는 것이자 기업의 야만을 답습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노란봉투법’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정부가 이같이 나오는 것은 국회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신안동, 상업용지

-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10층, 72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3억

대인동, 상업용지

- 롯데백화점 부근
- 대지 15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9층, 64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0억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 중 17층
- 계 14평, 전 9평
- 무등산 방향
- 일조권 전망최상
- 사무실 전용
- 매매 - 6100만원

덕남동, 임야

- 전대병원 부근
- 지분매매, 20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 그린벨트, 도로접
- 개발호재 많음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6천만원

상담 및 문의. 010 - 4159 - 9700